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1946년 10월 26일 창간

i-honam.com

제 3581호

(음력 7월 22일) **2023년 9월 7일 목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청년·신혼부부에 '만원 신축아파트'…전남도, 전국 최초

주거안정 위해 2800억 투입, 16개 군에 1000 가구 건립 전남개발공사에 '전남도 주거복지센터'설치 사업 주관

전남도가 청년층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만원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 기로 해 주목된다.

전남도는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남의 총인구수는 7월 말 현재 181만71명으로 만 18~39세 청년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전남의 청년인구는 6만 7314명이 감소했다. 이는 고흥군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다.

이에 전남도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청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 주택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총 2893억원 규모의 청년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을 마련했다.

사업비는 전남 자체 예산과 광역 소멸기금 으로 충당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용면적 84㎡(32 평형) 이하의 주택을 제공하고, 청년에겐 전용 면적 60㎡(17평형)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보증 금 없이 월 1만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는 만원아 파트가 전용면적이 협소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살기에는 불편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이 를 대폭 개선하고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선호 하는 평면 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가 절감된 주거비를 모아 자립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임대 조건 을 설계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층의 경우 안정 적 정착 지원을 위해 최초 거주기간을 기존 공 공임대아파트(2년) 대비 2배 연장한 4년으로 늘렸다.

신혼부부는 아이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3년 씩 연장할 수 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기초 지자체에 2035년까지 1년에 100~200가구씩 순차적으로 균형 있게 건립한다.

사업 지원 대상 지자체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순천.여수,나주.무안을 제외한 16 개 군이다.

전남도는 지속 가능한 사업실행력 확보를 위해 도의회와 신속한 협의를 거쳐 가칭 '전남 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조례에는 청년·신혼부부 주택사업 지원 근 거와 입주자격·기간, 월 임대료 등에 대한 세 부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월 1만원 임대료가 지속되도록 운영비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도 별도로 조성한다. 현재 운 용 중인 한옥 발전기금 530억원에 추가로 150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6일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공감과 소통을 위한 9월 정례조회에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억원을 출연해 총 680억원 규모의 가칭 '청년 주거 안정·한옥 기금'을 전국 최초로 조성할

이 사업은 전남개발공사에 내년 상반기까지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매년 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을 통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서비스와 주택사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도민의 입 장에서 '원스톱 서비스'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르는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해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 시·군에서 국토부의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반값주택을 추진 중이고 일부 시·군에서 '만원주택'을 시행하면서 시·군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전남도 차원의 '전남형 만원주택 1000가구사업'을 1단계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가 6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시립정신병원앞에서 총파업 잠정 중단과 함께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는 지난 6월 15일부터 이날까지 84일째 임단협 승계 등을 촉구하며 파업을 이어왔으나 최근 중재에 나선 광주시가 이달 안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이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84일째총파업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노조. 업무 복귀 결정

임단협 승계를 촉구하며 84일째 파업을 이어온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노조가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는 6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의 공공의료 지원기준 마련과 관련 조례 정비 약속에 병원 측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하며 업무에 복귀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공공의료에 원들에 대한 근무표와 업무계획을 이날 오후까지 제출하라. 공공병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교섭에도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병원 측은 "공공의료와 병원 정상화를 위한 결정을 환영한다. 교섭 과정이 진행 중인 만큼 소통 창구를 상시 열어두고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앞서 노조는 올해 초 새롭게 병원 위·수탁 운영을 맡은 빛고을 의료재단이 임금 개편을 예고하자 반발, 지난 6월 15일부터 이날까지

노조 "광주시, 이달 말까지 공공의료 적자 해소 방안 기대" 병원 "운영 정상화 협조 결정 환영…소통 창구 상시 열어"

서 발생하는 공익적자 보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병원 측이 주장하는 구조적 적자에 대한 해법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며 "공익 적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 만큼 빛고을의료재단은 시립병원의구조적인 적자를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전가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 측은) 일방적이고 반강제적으로 바꿨던 취업규칙과 임금체계를 원상회복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병원 측이) 또다른 복수노조를 만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 측은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

84일째 파업을 벌여왔다.

병원 측은 수익의 80%에 달하는 인건비 비중을 줄이는 취지에서 임금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노조는 연봉제로 전환될 경우 임금이 기존 대비 일정 부분 깎이는 점에 반발, 전임 병원 운영 재단과 맺은 임단협 내용 승계를 촉구해왔다.

이에 노사와 광주시는 지난달 초 두 차례에 걸쳐 병원 이사장, 노조 본부장, 광주시 관계자 가 함께하는 3자 교섭을 가졌으나 모두 결렬 된 바 있다. 변용일기자

금·토요일쉽니다 홈페

